

의안번호	2208546
의 퇴 인	한병도의원
회 답 일	2025.4.3.
추계번호	25D1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800만원, 2030년 1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억 9,400만원(연평균 1억 7,9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 축소 (안 제108조제3항)	178	173	176	181	186	894	179

- 주: 1.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 축소(안 제108조제3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 개정안에 따라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8조제3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에 대한 서면신고를 면제받는 기관의 범위에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등을 제외함	의무규정
2	안 제108조제14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선거여론조사 신고 후 공표·보도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8조제3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
2	안 제108조제14항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제출 건수의 증가로 기존 시스템의 확장, 인력 증원 등으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다만, 시스템의 확장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라 함)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를 면제받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축소하도록 규정하여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의 업무 증가¹⁾가 예상되므로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개정안에 따라 2명(6급, 여심위 자료)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에 소요되는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를 추계함
 - 여심위는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2명 증원 시 기존 공간을 재배치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무실 임차료는 고려하지 않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²⁾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른 사전신고 건수는 2,572건이며 개정안에 따라 2,83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명(6급)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로 한정하여 추계
- 본 추계에서는 인원에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한 후, 기본경비 비율,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여 각 비용을 산출
 - (보수) 2026년 1억 4,100만원, 2030년 1억 5,500만원으로 추정
 - (인원) 6급 2명
 - (1인당 보수) 2025년 기준 6급³⁾ 보수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상승률⁴⁾ 적용
 - (기본경비) 2026년 900만원, 2030년 1,000만원으로 추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5년 기준 기본경비 비율은 6.7%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 (기관부담금) 2026년 1,800만원, 2030년 2,100만원으로 추정
 -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 적용⁵⁾
 - (자산취득비) 2026년 1,000만원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총 인원예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501만원⁶⁾을 곱하여 산출

[표 2] 공무원 증원에 따른 보수 등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보수	1인당 보수(a)	70	72	74	75	77
	6급(b=a×2명)	141	144	147	151	155
기본경비(=b×6.7%)		9	10	10	10	10
기관부담금(=b×요율)		18	19	19	20	21
자산취득비		10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4) 2025년 3%, 2026년 이후는 2023~2025년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

5) 2026년 13.1%, 2027년 13.1%, 2028년 13.2%, 2029년 13.3%, 2030년 13.4%

6)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197,000원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1인당 자산취득비 산출

- 추계결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을 축소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1억 7,800만원, 2030년 1억 8,6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8억 9,4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141	144	147	151	155	738
기본경비	9	10	10	10	10	49
기관부담금	18	19	19	20	21	97
자산취득비	10	—	—	—	—	10
합계	178	173	176	181	186	89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 대상기관의 축소로 인한 업무의 증가로 공무원(6급 2명) 증원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부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